

시체·검시·사인확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 고찰

김윤신¹ · 김태은²

¹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²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Received: July 20, 2018
Revised: August 6, 2018
Accepted: August 21, 2018

Correspondence to

Youn Shin Kim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09 Pilmun-daero, Dong-
gu, Gwangju 61452, Korea
Tel: +82-62-230-6998
Fax: +82-62-234-4584
E-mail: ysk007fm@hotmail.com

Review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s Governing Postmortem Inspection and Death Certification

Youn Shin Kim¹, Tae Eun Kim²

¹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wangju, Korea,

²Department of Law, Chosun University College of Law, Gwangju, Korea

The official investigation of death and the certification of the cause of death are among the most critical roles played by the government in maintaining public safety, carrying out public health surveillance, and compiling national health statistics. Currently, Korea has no single comprehensive act governing the postmortem examination system. Therefore, there might be some discord, contradiction, or defect in the current legal regime governing the examination of dead bodies. The authors reviewed various legislative instruments that contain the words, “death,” “corpse,” “autopsy,” “death investigation,” and “cause of death” by searching the website of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www.law.go.kr>), which is run by the government. The authors found 64 laws and rules, of which 47 were reviewed for this study, after ensuring relevance to the subject. After a review and comparison of the acts and rules, the authors point out the discords, contradictions, and defects in the current legal regime on corpses and death investigations. They then present the need for a single comprehensive legislation addressing postmortem examination.

Key Words: Autopsy; Cadaver; Death investigation; Cause of Death

서 론

인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삶의 단순한 끝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도 가족 또는 사회와 연결되는 인륜적, 법률적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사인확인제도는 범죄나 사고로 인한 사망은 물론, 산업현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죽음까지를 망라하여 모든 죽음의 상황을 조사하고 규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치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민의 삶에 대한 현대국가의 지향 목표는 살아있는 동안의 복지는 물론, 사망에 있어 그 사인을 명

확히 밝히는 것에까지 미쳐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대체불가한 절대적인 가치이며, 누구나 죽음이라는 삶의 마침을 맞이 하기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 함은 생명의 마지막 모습인 죽음에 대한 존중까지도 포함해야 한다[1]. 어떠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함이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발생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사인확인제도는 ‘변사(變死)’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이라는 극히 제한된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어, 사인의 조사가 마치 범죄수사의 일

부인 것으로만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

사망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라는 사실 관계를 시작으로 사망자 본인과 그와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 사이의 여러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근거가 되고, 이러한 사망의 확인과 사인의 증명은 의학적 판단에 일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 사망의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조사는 장례와 사망 신고를 위한 행정 절차에서부터 상속과 보험금,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산정·지급기준으로서 민사절차에도 관여하고, 가해자가 있는 죽음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를 위한 형사절차에도 요구된다. 나아가 각종 감염병, 의료사고, 교통사고, 대량재해 및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사인규명은 유사한 상황에서의 사고의 재발을 막는 예방적 기능을 통해 안전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수는 280,827명이다[3]. 이러한 수치에 근거할 때, 한 사람의 사망은 직계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직장동료와 지인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사인의 확인을 위한 국가제도는 이렇게 다양한 범위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검시제도는, 주로 범죄로 인한 사망을 중심으로 국가 사법작용이 관여하는 강제처분에 의해 사인 규명이 이루어지지만, 내용적으로는 변사라는 단어 하나에만 의존하여 부검 또는 사인규명의 필요성이 결정되고 있어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정교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전문성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소위 검시선진국 수준의 사인확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시체와 해부, 검시, 사인확인 등의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과 행정규칙을 검토하여, 상호 적용에 있어서 모순점이나 미비점은 없는지, 그들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인확인 및 검시 제도로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립하고, 향후 더욱 바람직한 검시관련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을 삼고자 한다.

본 론

1. 연구 대상 및 방법

한 개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사망자 개인은 물론,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감염병이나 범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의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체와 사인확인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망, 시체,

변사, 부검, 검시, 사망원인 등의 관련 단어를 입력하여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탑재된 법령과 행정규칙을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형사소송법」, 「형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식품위생법」, 「통계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인구동향조사규칙」,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암관리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 보호규칙」, 「군사법원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수사규칙」, 「교도관직무규칙」, 「행정검시규칙(경찰청 예규 제 503호)」, 「경범죄처벌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총 64개의 법령이 검색되었다. 그 중 사인확인제도에 관한 본 연구와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민법, 국민연금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저작권법 등 단순히 ‘사망’이라는 용어만 법조문에 담겨 있는 경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관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등 ‘검시’나 ‘사인확인’과는 거리가 있어 연구목적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17개의 법령을 제외하고, 앞서 열거한 47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민법(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시체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사자의 인격권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인격권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그것이 법정의 유언사항인지 아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장례·장기기증·분묘개설 기

타 자신의 유체에 대한 사후처리에 관한 한, 이른바 ‘사후적 인격보호’의 한 내용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은 그의 사망에 의하여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인격 보호의 필요는 사망으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사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 27670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는 사망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통상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제도적 절차를 유지하는 책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렇듯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사자의 인격권과, 시체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죽음에 대하여, 시체에 대하여, 죽은 자의 권리가 될 수 있는 사인확인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우리 법은 어떤 규정들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 대상이 된 법령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검토

(1) 사망, 시체·변사체의 발견·검안 시 통보 및 신고의무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하며(의료법 제26조), 의사 등이 감염병환자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에서 임산부의 사망 혹은 사산, 신생아의 사망이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 에이즈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이즈예방법 제5조)와, 결핵환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결핵예방법 제8조)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밖에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하거나 변사한 경우에는 소장이 검사에게 통보하고(형집행법 시행령 제148조),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년원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보호소년법 시행령 제20조), 아동사망사건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7조의2).

(2) 시체의 해부와 그 자격

시체해부법 제2조(시체의 해부)와 동법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 따르면,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 의사 포함)로서, 의료법상의 종합병원의 전속전문의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어야 하며,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포함) 또는 종합병원에 재

직하고 있어야 하고, 아울러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2)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국민 보건의 위해 방지를 위한 해부명령에 의한 해부, (4)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부, (5) 검역조치로서의 해부 등이 있다. 그밖에 시체해부법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에서는,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의학연구 목적의 해부도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0조(해부명령)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위해 지정해야 하는데, 해부 담당의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20조). 해당 부령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인데, 이 규칙에는 단지 감염병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개인보호장구 등 시체의 관리 방법만을 담고 있을 뿐, 해부의사의 지정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또한 시체해부법(제2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른 시체 검안 또는 해부 규정과 연결된다. 이러한 해부명령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한 검역조치로서도 내려질 수 있다(검역법 제15조, 검역조치). 그 밖에도, 변사자 및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제222조)에 따라 ‘검증과 필요한 처분’(제140조), 그리고 ‘감정’(제173조)의 형태로서도 시체 해부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또한 법원도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 규정에 따라, 시체에 대한 해부를 명할 수 있다.

(3) 시체와 해부의 관리 및 주의 규정

시체의 취급에 있어서는 정중한 예의를 갖추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시체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組織)에 대하여도 이를 인도하거나 화장할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 한다(시체해

부법 제17조, 시체에 대한 예의).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일부를 꺼내는 자는,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타인에의 양도, 취득, 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시체해부법 제10조, 시체의 관리). 형사소송법(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에서도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시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유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체나 유골에 대한 오욕 행위를 처벌하며(형법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변사체에 관해서 사체를 은닉, 변경하거나 검시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형법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경범죄처벌법(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서도 시체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동법 제3조 5호(시체 현장변경 등)에서는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을, 6호(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에서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등).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고,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유골·유물은 방부처리 후 불침투성 관(棺)에 밀봉하거나 화장조치가 된 경우가 아니면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는 복지부령에 따른 검역조치가 필요한데(검역법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구체적인 내용은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검역조사 등)에서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를 정하고 있다.

선박의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할 수 있다(선원법 제17조, 수장). 이때 수장이 허용되는 요건(선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장)은 (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것, (2)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할 것(감염병의 경우는 예외), (3)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함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예정인 경우일 것, (4)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일 것, (5)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 후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사법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에서도 사망 또는 사산에 있어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망 이후 장례를 치르기 전 최소한의 시간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시체의 해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의 서면동의가 있

어야 한다(시체해부법 제4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그러나 해부에 관한 법정유언이 있거나, 그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가 있는 경우, 또는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인 조사를 위해 해부가 필요하나, 유족의 동의를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동의 없이도 시체해부가 가능하다.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단체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시체해부법 제11조, 이상 발견시의 조치).

(4) 검시(檢視)의 주체와 실무 절차

검시(檢視)는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4], 이를 통해 사인의 확인 혹은 그것을 위한 추가 조사의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이 그 근거이다. 다만 사체가 군인일 경우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군사법원법 제264조, 변사자의 검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검시)에 따르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직접 검시를 행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하고, 이후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의 지휘아래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대행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경찰이 검시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변사자의 검시),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6조, 검시에 연속된 수사). 그러나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7조 시체의 인도). 동 규칙 제31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른 경찰의 지휘를 받기 위한 보고사항으로는,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인적사항에서부터 변사자의 인적사항, 사망의 추정연월일시,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시체의 상황 등이 포함

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51조(변사자의 검시)에서 변사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제52조(검시의 주의사항)에서 현장 및 유류품의 보존, 변사자 지문채취, 의사를 통한 사체검안서 작성, 제53조(검시와 참여자)에서 변사자의 가족이나 시군구 공무원의 참여, 제54조(자살자의 검시)에서 자살의 경우 교사 또는 방조자의 조사와 유서의 진위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5) 검시(檢屍)와 병리부검, 검안 관련 법령

검시(檢屍)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검안과 부검으로 나눌 수 있고, 검안에 있어서는 시체를 손괴함이 없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 부검이란 시신을 해부하여 사망의 원인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추정할 수 없어 좀더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장기 및 조직의 절개, 채취가 가능한 시체검사를 말하며, 여기에는 병리부검, 행정부검, 사법부검이 있다[5].

병리부검이란 외인이 작용하지 않은 죽음, 즉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혹은 병사로 봄이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사인을 확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부검으로, 사인 규명과 함께 질병의 원인과 경과, 치료효과의 규명 등 의학적 목적과 관심에서 이루어진다[5]. 병리부검 자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은 검색결과 확보되지 않았으며,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료부) 제9항에서 일반진료과장은 병리해부를 분장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2005년에 신설된 규정으로 우리 법령 중 병리해부라는 용어를 담고 있는 유일한 규정으로 보인다. 굳이 예를 찾자면, 산재보험법(제91조의11, 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에 따른 해부가 병리부검의 한 예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신에 대한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산재공단의 의료기관은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시체해부의 경우 혹은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전신해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사망에 대하여 검시(檢屍) 및 사망진단서 작성의 책임을 진다(교도관직무규칙 제82조, 사망진단서 작성).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검시(檢屍)를 받은 후, 해당국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

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외국인보호규칙 제23조, 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그밖에 항공·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한 검시(檢屍)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형집행법 시행령 제147조(검시)와 제148조(사망 등 기록)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검사하여야 하고, 의무관은 수용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장에 그 병명·병력(病歷)·사인 및 사망일시를 기록해야 하며, 수용자가 자살이나 그밖에 변사한 경우에는 검시가 끝난 후에는 검시자·참여자의 신분·성명과 검시 결과를 사망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해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도 검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부의 경우는 의사,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의라야 해부를 할 수 있다고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격의 범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의료법이나 시체해부법 외에도 현행법상 검안을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감염병의 예방조치로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환자의 사체(식품위생법 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업무상의 사망의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근로기준법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선원의 직무상 사망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선원법 제104조, 해양항만관청의 심사·조정) 등이다.

결핵환자가 사망하였거나 결핵환자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국립소독도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안을 실시해야 하며(국립소독도병원 운영규칙 제11조, 사망자의 처리), 에이즈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검안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이즈예방법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로써 사체의 검안을 할 수 있으며(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장제급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청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자동차손배법 제22조, 심의회의 권한).

검안은 사법기관에 의한 검시에서도 필요하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2조, 검시의 주의사항)에 따라, 검시를 할 때에는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며, 범죄수사규칙 제34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에서 사법

경찰관이 검사에서 조사할 사항에 사망의 추정연월일,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의사의 검안이 포함되어 있고, 주의 사항으로서 의사를 통한 검안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다.

(6) 검시 우선 규정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의한 해부 또는 검시가 필요한 죽음에 있어서는 해부 또는 검시 전에 조직 채취나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채취할 조직·이식할 장기와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려서는 채취·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이를 허용할 수 있다(인체조직법 제18조, 장기이식법 제24조). 이렇듯 두 법률에서 조직 채취나 장기 이식과 관련하여 ‘검시 우선’ 규정을 두는 것은 시체해부법 제7조에서와 같이 변사체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검증과 감정, 그리고 검역법상의 검역조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7) 행정검시 및 행정부검

행정검시의 대상은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려병사자로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시체로 한다(행정검시기규칙 제2조). 지구대장 등은 행정검시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시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서장은 행정검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검시를 명할 수 있다. 행정검시의 명을 받은 지구대장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Fig. 1)를 작성하고, 사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행정검시기규칙 제3조). 행정검시 도중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행정검시기규칙 제4조).

행정부검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시체해부법에 의해 시행되는 부검으로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변사체, 특히 전염병, 행려사망자, 사고사(재해사 포함), 병사이나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은 사인 불명례 또는 사망의 종류가 불확실한 시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부검이다[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체해부법 제6조(시체해부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인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검역법(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검역조치로서, 특히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를 해부할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

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시체 해부를 명할 수 있다.

(8) 사법부검

사법부검이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변사 또는 그런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 범죄와 사망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죽음에 관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사법작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검이다[5].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39조(검증)와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에서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검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의 하나로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서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검 시 조 서				
20 . . . 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지구대·파출소장은 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시체에 대하여 행정검시한다.				
사 망 자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거			
	(4) 등록기준지			
사 망 장	(5) 일시			
	(6) 장소			
(7) 시체의 모양 및 상황				
(8) 사 인				
(9) 검 시 장 소				
(10) 발견일시 및 발견자				
(11) 의사의 검안 및 판 계 인 의 진 술				
(12) 소지금품 및 처리				
(13) 참 여 인				
(14) 의 견				
이 검사는 20 . . . 에 시작 20 . . . 에 끝나다.				
20				
지구대·파출소장 (인)				

Fig. 1. Official form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report.

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 부검을 위해서는 시체를 압수하는 절차를 위해 영장을 요한다.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따르는 사체의 해부나 분묘의 발굴을 할 때,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에 따라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하는데, 이 허가장의 청구는 검사가 해야 하며, 판사는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검증과 감정에 따른 사체의 해부를 할 때는 미리 유족에게 통지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서면을 통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4조와는 달리 유족의 서면승낙은 요하지 않는다.

(9) 사망원인 및 관련 통계자료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통계법, 인구동향조사 규칙 등 여러 법령이 관련된다.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3조(조사대상)에서는 사망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제4조(조사항목)에서는,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망종류, 의사등 진단자의 이름, 해부소견, 외인사(外因死)에 있어서는 사고종류와 의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계법(제24조의2 행정자료의 제공)과 연결되어 사망원인을 포함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엽제법 제31조(자료의 제공요청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119법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따라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역학조사)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암관리법에 따른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서는 통계법에 따른 사망원인 통계와 암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령은 통계법은 물론, 가족관계등록법, 인구동향조사 규칙 등과도 상호작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망원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10) 사망의 통보와 신고 및 행정절차, 사망의 입증 문서

사망신고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있어 사망의 원인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이라 함은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확인서, (3) 그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등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여기서 대법원예규는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인데, 그 제2조 제2항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호의 그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1)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2)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에서는 장사법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망자의 등록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이 검시조서(Fig. 2)를 작성하여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87조,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사형의 집행 또는 재소 중 사망 시에 있어서는 교도소장이 통보의무를 진다(제88조, 사형, 재소 중 사망)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127조(사망 통지)에 따라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친족 등에게 시신의 인도청구가 있는 때에는 인도하여야 하며(제128조, 시신의 인도 등), 동법 시행령(제146조, 사망통지)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장소 및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한다. 같은 시행령 제147조(검시)와 제148조(사망등 기록)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검사해야 하고, 의무관은 수용자의 질병 사망에 있어 사망장에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일시를 기록해야 하며,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이나 그밖에 변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가 끝난 후에는 검시자·참여자의 신분·성명과 검시 결과를 사망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19법 제16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인계)와 수상구조법 제35조(구조된 사람·선박등·물건의 인계)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구조본부의 장 등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유족에게 인계해야 하며,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도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인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에 의한 사망 신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이해된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는 대표적으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제7조(조정의 신청)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경우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피해구제급여 신청의 경우에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검안이나 부검의 결과는 보상금 산정이나 각종 급여지급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보상의 신청 등)에서는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는 생계급여 등 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밖의 장제 조치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장제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서는 공제급여액 결정에 있어 공제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체 및 사인 확인에 관한 우리의 제도는 다양한 법률과 규칙을 통해 서로 연계되거나 중복되면서 운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시체해부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등 시체, 검시, 사인확인제도를 다루는 기본 법률은 물론, 법령만 봤을 때는 관련성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여러 법규의 세부적인 조항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22조에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소송법은 물론 의료법과 시체해부법 어디에서도 변사에 대한 정의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방해)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331 판결), 변사자를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에 근거하여 변사를 정의한다면, 현재 검시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변사를 중심으로 한 많은 부검들은 그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논란에 휩싸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라 함은 자연사가 아니면서 사인을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유추될 수 있을 것이나,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사망인지 부자연스러운 사망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서 부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시체와 관련한 용어에 있어서도 각 법령별로 통일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 주검에 대한 표현을 시체, 사체, 시신 등으로 개별 법마다 달리 하고 있고, 해부와 부검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의 용어임에도, 개별법의 조문에 따르면 마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검시(檢屍)와 검시(檢視) 같이 한자를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전달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시체와 사인 확인제도에 관한 단일법의 필요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

1. 사망, 시체·변사체의 발견·검안 시 통보 및 신고의무

의료법 제26조에서 의사 등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54호서식]

검 시 조 서

... 00:00 ○○○○검찰청 검사 ○○○○의 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 ○○○는
(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자에 대하여 이를 검시한다.

변 사 자	성 명		성 별		연 령	세
	직 업		국 적			
	등록기준지					
	주 거					
변 사 장 소						
검 시 장 소						
사체의 모양 및 상 황						
변 사 연 월 일						
사 인						
발 견 일 시						
발 견 자						
의사의 검안 및 관계자의 진술 소 지 금 품 및 유 류 물						
시체 및 휴대품의 처 리						
참 여 인						
의 견						

이 검시는 ... 00:00에 시작하여 ... 00:00에 끝납니다.

○○○○경찰서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Fig. 2. Official form of postmortem inspection report.

데, 근본적으로 변사의 의미나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검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검시를 하여야 할 시 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신고가 누락될 소지가 많다. 결국 변사 여부의 판단은 현행법상 검시의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맡겨지는데, 시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없이 부검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자칫 범죄로 인한 사망이 발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더불어 검시의 대상이 되는 변사체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법부검과 행정부검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며,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 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시체해부법에 근거한 행정부검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치로 전락해 있다.

감염병환자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도 보고 또는 신고의 의무(감염병예방법 제11조)가 있지만, 실무상 검안만으로 감염병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감염병임을 알고 검안이 이루어진 경우에 부과되는 의무로 이해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에이즈 감염인(에이즈예방법 제5조)과 결핵환자(결핵예방법 제8조)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신고하게 하는 의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에서 임산부의 사망 혹은 사산, 신생아의 사망이 있을 때(모자보건법 제8조), 그리고 결핵환자의 사망에 대하여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모자보건향상과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입법 취지로 수긍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하거나 변사한 경우(형집행법 시행령 제148조)의 통보의무나,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이 사망한 경우(보호소년법 시행령 제20조)의 보고의무는 국가 교정 시설에서의 사망에 대한 인권보호차원에서의 관리·감시작업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규정이라 인정된다. 다만,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하거나 변사한 경우만을 보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허점으로 보인다. 병사한 경우의 보고절차에 대한 법 규정은 찾지 못하였으나, 수용중의 병사라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적 관심이나 의학적 관리가 제공되고 있었는지 등, 수용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도 입법상의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아동사망사건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아동복지법 제27조의2)하도록 한 규정 역시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협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시체의 해부와 그 자격

시체해부법 제2조(시체의 해부)와 동법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는 시체해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해부집도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

다. 법에 따르면,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직접 해부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지도하에 의학 관련 전공 학생에게도 해부가 허용된다. 여기까지는 의학교육 혹은 연구목적의 해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나,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의 규정은, 치과대학에서의 연구를 제한하는 악법이 될 수 있음도 검토되어 하겠다.

해부의 자격은 상당히 복잡하고 필요 이상으로 기준이 높다.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포함)로서, 종합병원의 전속전문의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어야 하며, 의과대학(치과대학 포함)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고, 더불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을 엄격히 함은 존엄성이 인정되는 시체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짐작되지만, 종합병원 전속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 등과 같이 그 실효성과 취지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밖에 국민 보건의 위해 방지를 위한 해부명령에 의한 해부와 검역조치로서의 해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부가 규정되어 있고, 해부의 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20조(해부명령)에 따른 해부는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지정하여 해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염병 전문의라는 자격은 현행법상 모호하다. 내과의 세부분과로서 감염내과전문의는 있지만, 그들을 염두에 둔 조항인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내리는 해부명령에 있어서, 해부 담당의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해당 부령(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해부시설 기준 등)에서는 감염병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체액으로 인한 오염 주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장례 시 안전 확보 등 시체의 관리 방법만을 담고 있을 뿐, 법률 제20조 제5항에서 말하는 해부 담당의사의 자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어야 한다.

검역조치로서의 해부명령에 의한 해부에 대해서도 그 자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소송법(제222조)에 따른 해부에 있어서 더 크게 부각된다. 변사체에 대하여는 검사의 검시(檢視)에 이어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 따른 검사의 범죄수사를 위한 ‘검증’, ‘검증과 필요한 처분’(제140조), ‘감정’(제173조)의 형태로 시체 해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죽음의 해부에 대하여는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 터인데, 그 자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교육연구목적의 해부에 대한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심각한 입법상의 흠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시체 및 해부의 주의 규정

시체의 취급과 표본 보존에 있어서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시체해부법 제17조),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시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41조)고 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망인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인의 조사와 해부에 대하여는 전혀 그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체해부법(제4조)에 따라, 시체의 해부를 위해서는 유족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인 조사를 위해 특히 해부가 필요하나, 유족의 동의를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동의 없이도 시체해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그 취지나 실무상의 적용가능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보다는 차라리 해부명령을 통한 행정부검의 형태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시체를 해부하면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단체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시체해부법 제11조, 이상 발견시의 조치)는 규정의 입법 취지는 분명해 보인다. 범죄와 관련된 시체는 수사기관에, 감염병과 관련된 시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이다. 그렇다면 사인 불명의 변사체로 발견되어 사법부검의 절차를 따라 부검이 시행되는 시체에 있어서 사인이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어떤 사후절차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입법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인 불명의 변사로 사법부검이 의뢰되어 해부를 진행하다 위협적인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임이 확인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시체해부법 제11조(이상 발견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이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안실 관계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교육을 거쳐, 그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박의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수장할 수 있고(선원법 제17조, 수장), 그 허용 요건(선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장)은 공해상에 있는 선박이,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감염병의 경우는 예외),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 후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에 상관없이 위생상의 이유만으로 수장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예컨대 통신을 통해 관계기관에 사망의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입

법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장사법(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과 선원법(제17조)에는, 사람이 사망한 후 24시간이 지나야 시체를 매장, 화장, 또는 수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짐작건대 사람의 사망 여부의 판단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이러한 시간적 기준은 무엇을 표준으로 정해졌는지 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다. 더불어, 이러한 장례에 관한 시간제한 규정이 시체 해부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죽음 이후 사람의 몸은 부패라는 필연적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시체현상은 사인 규명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은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바,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

4. 검시(檢視)의 주체와 실무 절차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는 변사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검시)에서는 변사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검사가 직접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시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대행할 수 있고, 주요 사건이 아닌 한 경찰에 의한 검시 대행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검시 주체와 그 대행에 대한 규정은 다분히 편의주의적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검경의 수사권 갈등에 비할 바는 아닐 것이나, 현장 업무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비효율을 야기할 소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변사체 대하여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변사자의 검시),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수사를 개시해야 하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제36조, 검시에 연속된 수사)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보고와 영장 청구, 해부여사의 위촉에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요하게 되므로, 신속한 수사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위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최소한 시체해부법에서의 자격을 준용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바람직하게는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검시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7조, 시체의 인도)고 정하고 있으나,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는 것에 비하여 범죄가 아님을 검시(檢視)만으로 명백히 입증하기는 대단히 곤란할 것인바, 그러한 판단의 실무

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수사실무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체가 잘못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사규칙 제31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른 검찰의 지휘를 받기 위한 보고사항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에서부터 변사자의 인적사항, 사망의 추정연월일시,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시체의 상황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우리 사법검시의 관심의 초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사인의 규명에 있어서 특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여부에 주목하는 검시 목적의 편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검시제도의 목적과 관심이 범죄혐의의 여부에만 쏠려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죽음에 대한 국가 행정작용으로서의 사인규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위 ‘변사’가 아닌 죽음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인규명이 담보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바람직하게는 사법기관의 검시목적에도 국민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사인규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제52조(검시의 주의사항)에서 의사를 통한 사체검안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검안서 작성을 위한 자격이나 경험을 갖춘 의사는 흔치 않으므로, 그 자격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 의사의 면허를 가진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이다. 제53조(검시와 참여자)에서 변사자의 가족이나 시군구 공무원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납득하기 어렵고, 검시에서 가족이나 시군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제54조(자살자의 검시)에서 자살의 경우 교사 또는 방조자의 조사와 유서의 진위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죽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자살로 예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죽음의 조사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더욱 광범위한 정보를 종합한 후에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세밀한 절차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검시(檢屍)와 병리부검, 검안 관련 법령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교도소의 의무관에 계 검시(檢屍) 및 사망진단서 작성의 책임이 있다(교도관직무규칙 제82조, 사망진단서 작성). 보호외국인의 사망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사유가 보고되어야 하고 검시(檢屍)를 받아야 하며, 이후 해당국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외국인

보호규칙 제23조, 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이러한 검시는 항공·철도사고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한 의학적 검사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형집행법 시행령 제147조(검시)와 제148조(사망 등 기록)에서는, 수용자의 사망에 있어 소장이 시신을 검사하여야 하고, 병사인 경우 의무관이 사망장에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일시를 기록해야 하며, 자살 혹은 변사에 대하여 검시가 끝난 후에 소장이 검시자·참여자의 신분·성명과 검시 결과를 사망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장이 시체에 대한 검사의 의무와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나, 사망의 확인과 검시를 실제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신분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병리부검을 직접 규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산재보험법(제91조의11, 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에 따른 해부가 병리부검의 한 예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분진작업과 관련한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의 동의서를 확보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부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밝혀서 유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검이라면, 유족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공공관서의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부검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하여 유족이 서면동의를 표하면 족한 것으로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해부의 경우는 의사,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의라야 해부를 할 수 있다고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병리부검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법의 취지는 사후라도 사람의 몸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짐작되지만,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병리전문의 자격 취득 직후에 국과수나 대학 법의학교실에서 부검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법에 따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또한 한의사의 해부에 대하여는 우리 법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해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도 검안이 가능하다. 여기에도 입법상의 흠결이 있다. 2009년의 법 개정으로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과대학의 기초의학교실에 소속한 법의학교수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지 못하여, 결국 검안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만다. 그러한 흠결의 원인은 검안 행위를 진단이나 처

방전 발급과 같은 맥락의 의료행위로 분류하여 의료업에 종사함을 그 행위의 전제조건으로 묶음으로써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사망의 진단 혹은 시체의 검안에 대한 규정을 그 행위의 특성 및 전문성에 맞춰 새로운 규정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안 행위는 실무상 사법부검의 전 단계로서 변사여부의 판단을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도 지적되어야 한다.

의료법이나 시체해부법 외에, 현행법상 검안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감염병의 예방조치로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환자의 사체(식품위생법 제86조), 업무상의 사망의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근로기준법 제88조), 선원의 직무상 사망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선원법 제104조) 등이 있다. 그러나 검안만으로 감염병이나 식중독, 업무상 사망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입법은 다분히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고 말 여지가 높은 바, 그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6. 검시 우선 규정

인체조직법 제18조(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와 장기이식법 제24조(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는 조문명과 내용이 동일하다. 이에 따라 조직의 채취나 장기이식과 관련한 해부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의한 검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면 그전에 조직의 채취나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검시우선’ 규정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인정된다.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채취할 조직·이식할 장기와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려서는 채취·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두 법의 현실적인 목적을 예외적으로나마 인정해주고 있으나, 문제는 이해관계와 관심의 초점이 서로 다른 관련기관의 협조를 얼마나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고, 우리의 현실상 아마도 실현되기 어려운 조항에 처할 우려가 커 보인다.

같은 맥락의 ‘우선’ 규정이 변사에 대한 의료법(제26조)상의 신고의무, 감염병환자의 사체에 대한 감염병예방법(제11조)상의 신고의무, 에이즈 감염인의 사체에 대한 에이즈예방법(제5조)상의 신고의무, 결핵환자의 사체에 대한 결핵예방법(제8조)상의 신고의무와 연계하여 사법적 목적이든, 행정적 목적이든, 그에 관한 종합적인 후속조치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입법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인규명을 위한 죽음의 조사’를 총괄하는 단독법의 입법 필요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7. 행정검시 및 행정부검

행정검시규칙(제2조)에 따른 행정검시의 대상은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려병사자로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시체이고, 업무처리의 효율을 위해 그러한 규정이 필요하리란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범죄에 기인되지 않음이 명백함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행려병사자라는 명칭이 매우 모호하고, 행려병사로 지칭되는 되는 죽음 중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알코올 등 약물남용과 관련된 사망, 기아나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단순히 행려병사라는 단어 하나에 이런 모든 죽음을 망라해서 처리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행정검시의 내용을 보면, 지구대장 등의 보고에 따라, 경찰서장이 행정검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검시를 명할 수 있고, 지구대장 등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행정검시규칙 제3조), 행정검시 도중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행정검시규칙 제4조)는 것이다. 행정검시의 결과는 경우에 따라 사법부검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어의 혼선은 업무의 혼선을 불러 올 수도 있다. 검시(檢視)와 검시(檢屍), 행정검시와 행정부검, 사법부검이 그것이다. 행정검시는 경찰서장이, 행정부검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지자체장, 검역소장이, 사법부검은 검사와 판사가 각각 권한을 갖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시체에 대한 조사의 모든 절차를 하나의 법체계 안에 담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한번 더 드러난다.

8. 사법부검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에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을 변사라고 할 것인가 이고 여기에는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실제로도 그것이 문제를 야기하였던 사건을 우리는 적잖이 경험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9조(검증)와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에 따른 법원의 검증 행위로서 사체의 해부가 가능하고,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 따른 검사의 범죄수사를 위한 검증 행위로서도 부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검사의 검증으로서의 부검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그러한 영장 청구의 전제조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신원불상, 사인불

명, 혹은 자살자의 부검이 왜 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처분으로서의 사법부검에 해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9. 사망원인 및 관련 통계자료

사망의 확인 및 그 사인의 조사는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인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각종 보상절차에서부터, 고엽제후유증과 관련한 국가보훈처의 업무, 119구조·구급 활동에서의 응급처치의 적절성 평가,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의 업무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나아가 정확한 사망 통계의 확보를 통한 국가 보건정책의 수립에 이르기 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통계법 제24조의2(행정자료의 제공)에서는 사망원인을 포함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3조(조사대상)에는 사망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조사항목)에서는,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사망종류, 의사 등 진단자의 이름, 해부소견, 외인사에 있어서는 사고종류와 의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동향조사 규칙 제4조의 조사항목이 그대로 우리의 현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양식에 들어가 있다(Fig. 3). 검안서에 왜 ‘해부의사의 주요 소견’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간 품어왔던 의문의 답이 여기서 찾아진 것이다.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망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행정검시를 명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죽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사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물론, 행정검시나 사법검시가 국가의 인구동향을 염두에 두고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어떤 작용이 또 다른 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관한 입법에는 관련 사항을 치밀하게 담아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즉, 인구동향조사 규칙에 따라 사망을 조사해야 한다면, 죽음의 조사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해야 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사법기관의 업무에 있어서도, 범죄혐의만이 아닌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검시가 필요함을 업무지침에 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국민의 죽음과 사인 확인을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나 관련 입법을 추

⑪ 사망의 원인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호 (나) (다) (라)		(나) (가)의 원인				
에는 (가)와		(다) (나)의 원인				
직접 의학적		(라) (다)의 원인				
인과관계가 명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확한 것 만을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적습니다.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⑬ 의인	사고 종류	[] 운수(교통) [] 익사	[] 중독 [] 화재	[] 추락 [] 기타()	의도성 여 부	[] 비의도적 사고 [] 타살
	사건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사 사 상	주소					
	사고발 생 장소	장소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기타()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검안)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Fig. 3. Detailed description items of cause and manner of death on official form of death certificate.

진할 필요가 있다.

10. 사망의 신고 및 행정절차, 사망의 입증 문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사망의 사실과 사망의 원인을 증명하는 주요 문서로 적용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경우(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제7조, 조정의 신청)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피해구제급여 신청의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의 사망신고에 대한 규정을 보면,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5조, 사망신고의무자)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으로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있어 사망의 원인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 아마도 첨부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참조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여기서 짚고 가야할 요점의 하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사망의 원인’을 증명하는 것은 그 의미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사망진단서가 사인을 중심으로 사망을 설명, 입증하는 문서라면, 전사확인서란 사망의 정황을 통해 단지 사망의 사실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기능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소위 ‘변사’라고 지칭되는 죽음에 있어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보다는 부검감정서가 사인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더 정확하고 정보 가치가 높을 것이나, 우리 현행법에서는 부검감정서를 사인을 입증하는 문서로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더욱이, 사망신고절차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따르면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인우보증을 통한 사망증명서(Fig. 4)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확인에 관한 우리 제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변사에 있어서 국가 강제력이 동원된 처분으로서 부검이 이루어진 경우, 대개 실무상 한 달 이상의 감정기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입법상의 고려 없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만으로 신고하도록 한 절차에도 허점이 있다. 더불어 사망의 신고에 있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담긴 부검감정서를 적용하지 못하고, 불충분한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검안서를 통해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장사법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따라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경우(제88조의2, 무연고자 등의 사망)에는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망자의 등록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이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제90조,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그러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다 함은 신원 불상의 시체는 물론, 부패 시체, 부분 시체, 훼손된 시체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빠조직의 일부만 발견된 경우도 있을 것인 바,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상 검안이나 부검의 결과는 보상금 산정이나 각종 급여지급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보상의 신청 등)에서는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는 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장제급여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서는 공제급여액 결정에 있어 공제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시체검안서의 내용정확성이나 의학적 신뢰성은 매우 낮다[6-8]. 검안의 결과만으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검안서의 실

[별지 서식]

사 망 증 명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사 망 자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 등록 번호
②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③ 장 소						
④ 사망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⑤ 증 명 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인)			관 계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인)			관 계	

첨부서류: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 다만,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1부.

Fig. 4. Official form of death certificate guaranteed by neighbourhood (acquaintance).

무적 한계를 인정하고 부검감정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인규명을 위한 행정적 목적의 부검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범죄로 인한 사망의 여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부검을 포함한 사인확인제도는 사법작용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국민보건과 관련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사인통계의 확보와 의학교육 및 의학연구의 기회 보장,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망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공평한 분배와 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관리하고 그 사인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는 많고 다양하다. 그와 같은 국가적 기능과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숙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관련기관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017R1D1A3B03031691).

References

1. Lim GO, Park HK, Lee SH, et al. Current issues on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Korean Criminol Rev* 2003;56:247-80.
2. Moon GJ. Moon's medicolegal investigation of death. Seoul: Chungnim; 1987. p. 10-3.
3.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death rate [Internet]. Daejeon: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cited 2018 Mar 2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
4. Chae JM. Death investigation and medico-legal examination of death. In: Kang DY, Kang HW, Kwak JS, et al., eds. A textbook of legal medicine. Seoul: Jungmunkag; 2007. p. 23-38.
5. Moon GJ. Moon's modern forensic medicine. Seoul: Ilchokak; 1995. p. 6-24.
6. Lee SY, Choi YS, Chung NE, et al. Inadequacies of death certification: the role of forensic pathologist. *Korean J Leg Med* 2002;26:72-9.
7. Kim YS, Lee HY, Yang KM, et al. Analysis of 12 autopsy cases related with insurance money. *Korean J Leg Med* 2008;32:13-23.
8. Kim YS, Park MI, Park JW, et al. Defect in post-mortem examination system reviewed by the realities of death certificate issuing. *Korean J Leg Med* 2008;32:101-4.